

모교 고려대학에서 자행되고 있는 시간강사법 저지 행태에 대한 고려대 민주동우회의 입장

지난 11월 22일 <고려대학교 강사법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고려대 학교 총장실/교무처를 항의 방문하여 강사법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그간 학교 당국이 시간강사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대외비 공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면서 언론보도를 접한 우리 졸업생들은 학교측의 행동이 시대에 역행하며 크게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학교 당국이 모교 동문들에게는 장학금과 발전기금 마련을 호소하면서 정작 학내 교육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처사를 모의했다는 사실은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시간강사 문제해결을 위해 11년이 넘는 세월동안 국회앞과 민주광장에서 텐트농성을 하신 김영곤 선배님을 시간강사에서 직위 해제한 것도 모자라, 패소에 따른 법률비용을 청구했다는 사실 역시 학교측의 비열하고 부당한 처사이다. 자유정의·진리의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 정신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2011년 입법한 후 8년이 지나 2019년 시행될 예정인 시간강사법은 대학 내 부당한 처우에 고통을 감내해온 시간강사들의 법적 지위와 최소한의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추진되어왔다. 강의가 없는 방학 중 급여는 연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지 대학이 시혜적으로 베푸는 추가적인 비용이 결코 아니다. 4대보험 지급도 마찬가지다. 교수들도 시간강사였던 적이 있지 않은가? 또한 한국사회의 학문위기 상황에서도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석·박사 학위 과정에서 연구활동에 열중하고 있는 학문 후속세대들에게 가르침의 기회를 보장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등록금만 받겠다는 발상은 자가당착적인 논리일 따름이다.

그간 강사법 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당사자였던 전국대학강사노조와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의 대타협은 대학과 강사 간의 사회적 합의로 이어졌고 강사법 시행에서 가장 큰 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는 부당한 대우를 감내한 시간강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정작 강사법 시행 현실화를 눈앞에 두고는 강의를 축소 변경하고, 졸업학점을 120학점으로 줄이고, 시간강사를 줄이는 등 꼼수로 일관해왔다. 이는 재학생들의 의견과 문제제기를 무시한 독단적인 처사였다. “전체 학부 강의 30%를 담당하는 시간강사, 인건비로는 1.5% 지출”이라는 부당한 현실은 고려대학교가 최소한의 형평성도 갖추지 못한채 교육주체인 시간강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보여준다.

모교 고려대학교가 보인 이러한 일련의 부당한 처사는 대외적으로는 세계대학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면서 내부적으로는 교육의 기본가치들을 저버리는 몰상식한 행태이다.

이에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는 다음의 의견을 학교 측에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학교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안을 즉각 중지하라!
하나, 학교 당국은 공대위의 요구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고려대 민주동우회는 공대위의 요구와 뜻에 함께할 것이다!

2018년 11월 28일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